

## 전략 V. 가계·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

보고부처 금융위원회 협업부처 기재부, 산업부, 국토부, 해수부

### < 요약 >

- ① (가계부채 관리) 「상환능력만큼 빌리고,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」 대출원칙을 착근하고,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
  - 「여신 가이드라인」 연착륙,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유도, 정책주택금융(보증자리론 10조, 적격 16조) 공급
  -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 받은 전세보증금을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,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상품 개발
- ② (기업 구조조정 추진) 상시·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 확대
  - 정부-채권단간 유기적 협조로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,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으로 전환
- ③ (금융시장·산업 안정)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을 제고
  - 글로벌 건전성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, 장기·안정적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, MSCI 선진지수 편입 등도 추진
- ④ (서민금융 지원 강화)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,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
  - 10%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, 통합지원센터 확대(4→32개), 고용복지+센터 상담인 배치(54→100개) 등 서민금융지원 확대
- ⑤ (금융소비자보호 강화)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(42일→21일), 맞춤형 교육 확충 등을 추진
  - 주가조작, 자금세탁, 금융사기,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, 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에 적극 노력

## I 2015년도 주요 정책과 평가

### ◆ 가계, 기업부채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본격 착수

- ① (가계부채)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통한 연착륙 추진
  - ① 미 금리인상 등에 대비한 안심전환대출 공급(3월, 31.7조원/32.7만건)으로 고정금리·분할상환 비중이 약 7~8% 상승
    - '15년말 고정금리 비중(35.9%), 분할상환 비중(39.0%) 모두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(35%, '15년말)를 초과달성
    - \* 최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66%가 비거치식·분할상환으로 취급
  - ② 은행 여신심사 선진화 추진(7월 → 12월)
    - 「상환능력만큼 빌리고,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」 원칙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출관행 개선
- ② (기업부채)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착수
  - ① 5대 산업(조선·해운·석유화학·철강·건설) 구조조정 방향 제시
  - ②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로 229개사를 부실징후기업 선정 (전년 대비 44% 증가)
    - \* 대기업 : ('14년) 34개 → ('15년) 54개 / 중소기업 : ('14년) 125개 → ('15년) 175개
- ③ (서민·소비자보호) 서민·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서 촉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 관리
  - ① 국민행복기금으로 47만명(당초 목표: 33만명) 채무조정('15.11월)
  - ② '15년 중 햇살론·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을 총 47만명(약 4.7조원)에게 지원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 예상
  - ③ 금융사기 피해가 2,023억원('14.하) → 873억원('15.하)으로 감소

## II 2016년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

### 1 대내외 불안요인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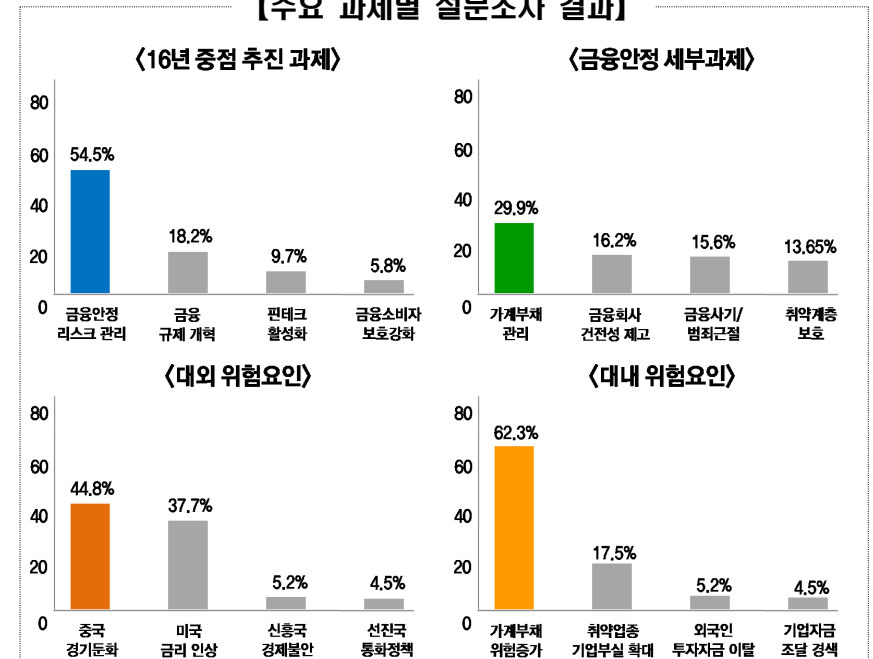
- ① (국외) 미국이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, 주요국의 추가적 경기부양책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
    - \* 세계 성장률 전망(IMF) : ('14년) 3.4 → ('15년) 3.1 → ('16년) 3.6
    -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 차별화(Great Divergence)와 중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, 중동·북한문제 등은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
  - ① (美 금리인상) '15.12월 기준금리인상 이후, 추가 인상속도 및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\* 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
    - \* (ECB) QE시한 연장 및 은행 초과기준 예치금리 10bp 인하('12.3일)
  - ② (신흥국 경기둔화) 중국 성장세 둔화 및 구조개혁(투자·수출 → 내수) 등 신흥국 경기 둔화 조짐 확산
  - ③ (지정학적 리스크) 북핵 리스크, 중동에서의 사우디-이란간 갈등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
- ② (국내) 저금리·저유가 등 내수여건 개선,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, 대내 리스크요인은 상존
    - \* 정부(3.1%), KDI(3.0%), BOK(3.2%), IMF(3.2%), OECD(3.6%) 등
  - ① (부채 리스크) 가계부채의 소득보다 빠른 증가와 기업실적 부진 속에 상환부담 확대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
    - \* 가계대출 증가율 : ('12) 5.2% → ('13) 6.0% → ('14) 6.7% → ('15.9) 10.4%
    - \*\* 한계기업(개) : ('09) 2,698 → ('11) 2,859 → ('13) 3,148 → ('14) 3,295
  - ② (금융산업 여건) 저금리·고령화 등으로 금융산업 수익성 악화
    - \* 은행 당기순이익(조원) : ('11) 11.8 ('12) 9.0 ('13) 3.9 ('14) 6.2 ('15.3Q) 5.6

⇒ 어느 해보다 시장안정을 위협할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만큼, 가계·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

## 2 전문가 서베이·간담회 결과

- ① (서베이) '16년도 금융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
  - 금융권 정책고객(금융사·협회 등)과 비금융권 정책고객 모두 “금융안정(리스크 관리)”을 최우선으로 선정

【주요 과제별 설문조사 결과】



- ② (간담회) 금융정책 수요자 간담회('16.1.7.)에서도

-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, 기업구조조정 추진,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, 소비자보호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

⇒ 서베이 및 정책수요자 간담회 등을 기초로 주요 정책방향 결정

### Ⅲ 2016년도 주요 정책

#### < 기본 추진방향 >

1.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상환부담 완화
2. 산업·기업 구조조정 적극 추진
3. 금융시장·산업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
4. 서민금융 맞춤형 상품 확대 및 지원 강화
5.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척결

#### 1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상환부담 완화

◆ 가계부채는 실물경제와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,  
냉온탕식 규제 보다는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연착륙 유도

① (가계부채 연착륙 유도) 「여신심사 가이드라인」을 통해 빚은  
‘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’, ‘처음부터 나누어 갚는’ 관행 정착

-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
- ② 주택구입자금 등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
- ③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, 대출금액 산정
- ④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

\* 가이드라인 연착륙을 위한 집단대출, 단기 소액, 긴급 생활자금 등의  
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수도권(2월)-비수도권(5월)의 시행시기 구분

※ 분할상환 목표 : ('16년) 40.0% → 45.0% / ('17년) 45.0% → 50.0%  
고정금리 목표 : 37.5% 40.0%

② (제2금융권 관리 강화)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 
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

- ① (보험업권) 은행권에 준하는 「여신심사 가이드라인」 마련  
(현재 보험업권 여신 선진화 T/F 운영중 → '16.하반기 시행예정)
- ② (상호금융 등) 비주택담보대출(토지, 상가 등)의 담보평가에  
대한 관리 강화(15.11월 행정지도 기 시행) 등을 차질없이 추진

③ (주택연금 신상품 개발)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 가계  
부채 감축과 함께 노후 소득을 제공하여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

- ①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을 통해  
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(일시인출 한도 상향 검토 : 50%→70%)  
- 그 외 주택연금 가입시 초기 보증료를 인하, 은행 출연료  
면제 등 인센티브를 검토
- ②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·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에 대해 더 많은  
연금을 지급하는 '우대형 주택연금' 추진(정부 출연 등 필요)
- ③ 보금자리론과 내집연금을 연계하여 향후 주택연금 가입 확약시  
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 혜택 부여

④ (정책 주택금융 공급) 서민의 주거관련 부채부담 완화

- ① 서민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론(10조원)을 안정적으로  
공급\*하고, 적격대출(16조원)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

\*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등 상품성을 개선

- ② 주택금융공사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금 상향(2→5조원) 및  
증자 추진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견고히 구축
- ③ MBS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품성 개선, 유통정보 공시 확대 등  
투자자 친화적인 선진 MBS 발행·유통시장 구축

⑤ (전세보증금 투자플 조성) 전세에서 반전세·월세로 전환된  
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부담 완화를 위한 투자플을 조성

- 다양한 자산에 대한 효율적 투자로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,  
운용수익의 주기적 배당을 통해 월세 납부 지원
-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손실 흡수장치도 마련

## 2 산업·기업 구조조정 적극 추진

◆ 3대 원칙(엄정평가·자구노력·신속집행)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

- ① (상시·선제적 기업구조조정)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
  -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(5월)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'옥석(玉石)' 구분
    - \* 대기업(신용공여 500억원 이상) 정기 신용위험평가 : 4~6월
    - 중소기업(신용공여 500억원 미만) 정기 신용위험평가 : 7~10월
  - 희생가능(玉) : 자구노력 전제로 한 금융지원으로 정상화
  - 지속불가능(石) : 신속정리 → 시장불안 해소·자원배분 효율화
- ② (산업별 구조조정) 정부와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산업별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경제활력을 제고
  - 정부내 협의체는 공급과잉 조정,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
  - 채권금융기관은 그 방향을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·효율적으로 추진
- ③ (시장친화적 구조조정)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여 채권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으로 큰 틀 전환
  - 유암코의 재원을 최대 3.25조원으로 확대하고 재무안정 PEF로 구조조정기업의 채권·주식 등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
  - 투자대상을 조속히 확정하여 기업구조조정 본격화(16.1분기)

## 3 금융시장·산업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

◆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글로벌 기준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

- ① (모니터링 강화) 금융시장·산업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계를 강화하고,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다 정교화
  - 금융상황점검회의,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·연구 체계화
  - 한은·금감원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다 정교화하고, 투자자 손실 예방을 위해 시장 쏠림현상을 수시 점검
- ② (건전성 강화) 바젤 III 등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지속 보완하고, 외환시장 대응여력도 강화
  -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해 '16년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, 시스템적 중요은행(D-SIB) 등을 본격 적용
    - 보험에 대한 IFRS4 2단계 도입은 글로벌 동향을 고려하여 검토
  - 외화 LCR\* 규제를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조치를 개선하는 한편,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정교화\*\*도 추진
    - \* 외화 LCR = 高유동 외화자산 / 향후 1개월간 외화 순현금유출(유출-유입)
    - \*\* 최근 금융불안 양상 반영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외화 유동성 확보 적정성 점검
  - 손실흡수여력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적정성 점검(16.1월)
- ③ (금융시장 안정) 장기 수요 확충,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등
  - ISA,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·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, 외국인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
  - 회사채 발행을 위촉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
  - '시장 안정기구' 운영 등(비상시 대응방안 점검)

#### 4 시민금융 맞춤형 상품 확대 및 지원 강화

◆ 정책서민금융, 맞춤형 채무조정, 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, 자활·재기를 적극 지원

① (정책 서민자금 공급 확대)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\* 공급을 현재 연 4.7조원(47만명) → 연 5.7조원(약 60만명)으로 대폭 확대

\* (햇살론) 2.0조원→2.5조원, (새희망홀씨) 2.0조원→2.5조원, (미소금융) 0.3조원→0.5조원으로 확대 공급, (비워드림론) 0.2조원 공급 지속

② (중금리대출 활성화) 중·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시 부담 완화

-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공급주체 육성과 보증보험을 연계한 중금리 대출상품 신규공급
-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심사·평가 → 다양한 금리구조 상품 출시

③ (채무조정 지원 강화)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른 신속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시스템 개편

- 만기 2개월 전 은행이 연체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상환기간연장, 이자유예,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·지원하는 “신용대출 119” 도입
- 신복위 워크아웃 지원시, 가용소득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원금 감면을 차등화(30~60%)

\*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최대 감면율은 현행 70% → 90%로 상향

④ (현장 지원 네트워크 확대)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‘통합지원센터’ 등 현장 접점을 전국 단위로 대폭 확대

-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과 연계하여,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총 32개소 ‘통합지원센터’를 신속히 구축(‘15년 4개소)
- 「고용·복지+센터」, 지자체 청사 등에 종합상담 및 일부 지원이 가능한 ‘상담·지원센터’를 현재 54개에서 약 100개까지 확대

#### 5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척결

◆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,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 함으로써,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지키고 신뢰금융 구현

① (소비자 보호기반 확충)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·사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, 소비자 권익·역량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

① 소비자 피해 확산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,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

- 아울러, 불안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추천 이유·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의무 부여 예정(적합성보고서 도입)

② 소비자 민원을 신속히 처리(평균 42일 → 21일로 단축)하고, 판매 수수료 공시·설명 강화 등으로 정보제공도 확대 추진

③ 소비자 보호 감독조직을 강화하고, 교육기회 확대(‘14년 160만명 → ‘16년 200만명) 및 청소년·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실시

② (금융범죄 엄정 대응) 신속수사·엄중처벌 원칙 하에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금융신뢰 강화

①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적 탐지·적발 및 국내외 감독당국과의 조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주가조작 엄단

② 자금세탁방지·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에 적극 대응

- 핀테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고, FATF 의장직 수행 등 국제규범 정립·이행을 선도

③ 방통위,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여, 5대악\* 척결

\* 보이스피싱 금융사기, 불법 사금융, 불법 채권추심, 꺾기, 보험사기